

世界經濟與件變化에 따른 經濟構造變化展望과 構造調整政策方向

左 承 喜

본고의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經濟組織이란 內生變數로서 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外生的 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專門化·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兼業 및 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經濟的 非效率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專門化와 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經濟構造의 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유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問題의 提起 : 世界經濟 與件變化와 經濟構造調整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수단의 발

달, 그리고 각국 경제의 開放化 進展에 따른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에 힘입어 世界經濟의 통합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여건변화를 利潤極大化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의 지구화·세계화 노력이

筆者 : 本院 先任研究委員

* 草稿에 대해 유익한 論評을 해준 本院의 李弘

강화되면서, 더욱더 세계경제의 單一市場으로의 統合이 진전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民間部門의 自生的 세계화·통합화 움직임을 반영하여 각국들도 정치적·경제적 노력을 통해 UR 등 汎世界的 次元의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정착은 물론 EU, NAFTA, APEC 등 권역별 통합화를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통합화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확대·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1세기에 기대되는 세계경제는 아마도 지리적·정치적 국경이 경제활동에 크게 제약이 되지 못하는 국경 없는 單一經濟圈으로 변모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경제의 統合化 進展은, 역으로 그러한 통합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市場의 통합은 잠재적인 市場規模의 확대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업들간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자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내의 기술혁신을 보다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Hayek, 1984). 특히 앞으로 情報·通信技術의

革新에 따라 경제사회의 정보화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單一市場의 出現과 정보화의 심화라는 市場과 技術의 양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개별국민경제는 단일세계경제권의 지역경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제구조조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個別國民經濟로서 이러한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세계경제여건변화가 시사하는 개별국민경제의 최적 경제·산업구조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市場規模擴大의 효율적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함의는 무엇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은 기업의 생산함수, 즉 기술적 생산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효율적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통합화된 세계시장의 일부로서 個別國民經濟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經濟構造調整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경제

求·劉承旻 博士께 감사드리며, KDI원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세미나, 그리고 한국산업연구원세미나에 참석해서 논평해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조를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일종의 外生的 여건으로 보고 정부가 최적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가 民間部門에 비해 보다 더 많고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의 최적 경제구조를 전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두번째의 접근방법은 이와는 반대로, 經濟構造란 市場競爭環境의 변화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응노력의 결과에 따라 內生的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최적 경제구조는 실제로 市場競爭過程을 통해 형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다고 본다. 즉 경제구조란 내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최적 경제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적응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시장외부의 힘, 즉 정부에 의해 그려질 수도 없으며 강요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經濟政策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제학의 과학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經濟構造에 대한 아주 대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것은 市場競爭이 할 일이라고 본다(Hayek, 1984 및 1989; 左承喜, 1994).

本稿는 대체로 후자의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본고는 우선 世界市場與件의 변화가 미래의 최적 경제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내생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經濟構造調

整方向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구조조정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세부적인 구조조정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民間部門의 자생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구조조정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감소와 민간부문의 역할증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內生的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一般的 模型을 제시하고, 比較靜態分析을 통해 다양한 市場與件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分析結果를 이용하여 금후의 世界經濟與件 變化展望에 따른 금후의 최적 경제·산업구조의 대체적인 모습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產業政策, 특히 製造產業 및 금융서비스산업 등 일부 주요산업의 구조개선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內生的 經濟組織論

본장에서는 경제조직의 內生的 變化過程을 설명할 수 있는 ‘內生的 經濟組織論’을 개발함으로써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內生的 經濟組織論의 동향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內生的 經濟組織論에 대한 概觀

經濟 및 產業組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경제생활이란 다양한 경제활동들의 유기적인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소위 경제·산업조직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어떠한 형태로, 서로간에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결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經濟的 組織의 문제는 작게는 가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크게는 일개산업이나 나아가서는 일국경제의 조직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경제조직문제의 핵심은, 분류단계에 따라 각각의 조직을 형성하는 個別 經濟活動의 포괄범위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별 單位 經濟活動들의 유기적 결합 및 연계관계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經濟分析의 주류는 이러한 경제·산업의 조직을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가정하고, 同 組織下에서의 자원의 최적 배분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經濟組織의 생성·변천과정을 內生的 現象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經濟理論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로 최근 크

게 주목을 받고 있는 新制度學派 經濟學(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학파는 經濟組織 및 制度란 궁극적으로 經濟內의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제고할 수 있는 方向으로 조직된다고 보는데, 組織·制度變化의 動因을 去來費用最少化 노력에서 찾는 去來費用學派(Transaction Cost School)와 情報不完全性의 극복노력에서 찾는 不完全情報理論(Theory of Imperfect Information)에 기초한 학파로 나누어진다(Bardhan, 1989).

經濟組織(Organization, Institution)이란 일종의 經濟內의 경기규칙(the rules of the game)으로서, 궁극적으로는 人間간의 거래계약관계를 규정함으로써 人間の 行動에 대한 제약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去來費用이란 이러한 經濟組織을 運營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총체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종 거래에 수반하는 情報費用, 去來契約의 協商, 監視, 調整 및 執行 등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經濟組織의 형태에 따라 그 경제가 지불해야 하는 去來費用(Transaction Costs)의 정도가 결정된다. 去來費用學派는 이러한 去來費用을 最少化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결과적으로 보다 效率的인 제도가 內生的으로 형성된다고 본다(Bardhan, 1989; Coase, 1960; Alchian and Demsetz, 1972; Demsetz, 1967; Williamson, 1989; North, 1992).

다음으로 情報의 不完全性を 강조하는 制

度學派는, 기본적으로 情報의 不完全性에서 연유하는 情報費用이 去來費用의 가장 큰 요소라는 점에서 去來費用學派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 내용은 去來費用學派보다 분석적으로 더 명시적이고 技術的이며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情報의 不完全性, 특히 계약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연유하는 經濟組織運營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조직의 내용이 內生的으로 개선된다고 본다(Bardhan, 1989; Stiglitz, 1986).

한편 또다른 접근방법으로서는 產業組織은 해당 경제활동에 대한 生産의 技術的 特性과 需要(즉 市場)의 크기에 따라 보다 效率的인 構造로 변화하게 된다는 內生的 產業組織理論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하나의 경제조직이 생성·발전되는 과정은, 동 제도가 포괄하는 각종 기능 및 활동의 生産技術的 特性에 따라 規模의 經濟下의 기능은 이들 기능이 창출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리·전문화되고, 範圍의 經濟下의 기능은 통합됨으로써 조직의 내용(기능의 포괄범위)이 보다 효율적인 構造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 Jwa(1994)는 Stigler(1951)와 Baumol, Panzar, and Willig(1982)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동 이론을 구성하고 실증적으로 金融產業의 構造變化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本稿의 內生的 經濟組織論은 바로 이러한 產業組織論的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동 접근방법이 신제도학파의 접근방법보다 경제여건변화와 경제조직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더 명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주관심인 世界市場與件變化의 經濟構造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하의 多機能經濟組織理論은 Jwa(1994)를 주로 원용하고 있다.

2. 多機能經濟組織理論의 展開¹⁾

가. 市場規模와 經濟組織

經濟組織理論의 嚆矢는 아마도 A. Smith의 『國富論』(1776)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Smith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分業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핀공장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市場規模가 커지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제품의 生産組織이 보다 더 專門化·細分化됨으로써 生産의 효율이 보다 向上된다고 본다 (Smith, *ibid*, Book I, Chapter I~III).

Stigler(1951)는 이러한 Smith의 분업이론을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市場規模와 經濟活動의 垂直結合 및 分離與否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을 보다 일반적인 구도에 맞게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經濟活動의 집합으로서의 경제조직의 내용은 각 경제활동에 대한 市場需要의 規模와 각각의 技術的 生産條件, 즉 規模의 經濟性(economies of scale)의 存在與否에

1) 同 理論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Jwa(1994) 참조.

의해 결정된다. 規模의 經濟下의 활동은 同活動에 대한 市場需要가 증대할 경우 전문화와 대량생산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經濟活動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規模의 경제성이 높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시장수요의 크기가 同 規模의 經濟의 이점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餘他活動들과 統合兼營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한편 規模의 非經濟下의 활동은 기술적으로 전문화의 이점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수요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여타 활동들과 통합점영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經濟發展이나 혹은 市場統合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전체시장 및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經濟組織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公式的으로 규모의 경제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S_N = C(y) / \sum_{i=1}^N y_i \cdot C_i(y) \dots\dots\dots(1)$$

$$S_T = [C(y) - C(y_{N-T})] / \sum_{i=1}^T y_i \cdot C_i(y) \dots\dots\dots(2)$$

여기서 S_N 은 N 개의 經濟活動, 그리고 S_T 는 그중 T 개의 경제활동에 대한 規模의 經濟概念을 정의하고 있다. $C(\cdot)$ 는 비용함수, y 는 N 개의 경제활동세트로서 $y=[y_1, \dots, y_n, \dots, y_n]$, y_i 는 i 번째의 개별 단위경제활동, 그리고 $y_T=[y_1, \dots, y_2, \dots, y_n, 0, 0 \dots 0]$, $y_{N-T}=[0, 0, \dots, 0, y_{i+1} \dots y_n]$, $C_i(y)$ 는

y_i 의 한계비용, $[C(y)-C(y_{N-T})]$ 는 T 개의 경제활동세트의 추가생산에 따른 增加費用(incremental costs)을 나타낸다.

여기서 規模의 經濟概念은, $S_N > 1$ 면 全活動 N 에 대해 規模의 經濟, $S_N < 1$ 면 規模의 非經濟, $S_N = 1$ 이면 規模에 대한 收穫不變으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S_T 의 경우는 T 개의 활동에 대해, 그리고 만일 $T=1$ 이면 個別活動에 대해 規模의 經濟概念이 정의된다.

Stigler의 組織論을 式 (1)과 (2)에 따라 재정리한다면, T 세트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S_T > 1$ 이면 T 개의 활동은 N 개의 활동 중에서 따로 分離·專門化된다.

나. 範圍의 經濟와 經濟組織

Stigler는 經濟組織의 문제를 시장규모의 크기와 생산의 技術的條件으로서의 規模의 經濟의 存在與否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산의 기술적 조건으로서 範圍의 經濟性(economies of scope) 概念이 새로이 개발되고, 規模의 經濟性 概念과 더불어 經濟組織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Baumol, Panzar, and Willig(1982; 앞으로는 BPW로 약칭)는 範圍의 經濟性을 多機能組織이 존재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으로 본다(BPW, *ibid*의 命題 9B1과 9B2, pp. 248~249). 논의의 편의를 위해 範圍의 經濟概念을 정의해 보기로 하겠다.

$$SC_N = [\sum_{i=1}^N C(y_i) - C(y)] / C(y) \dots\dots(3)$$

$$SC_T = [C(y_T) + C(y_{N-T}) - C(y)] / C(y) \dots\dots\dots(4)$$

여기서 SC_N 은 N 개의全體經濟活動들간의範圍의經濟를 측정하며, SC_T 는 그중 T 개의부분세트 활동들간의 범위의 경제를 측정한다. 그리고 $y_T = [0, 0, \dots, y, 0, \dots, 0]$ 를 나타낸다. 이때 $SC_N > 0$ 면 N 개의 전활동 서로간에 범위의 경제가 있으며, $SC_N < 0$ 면 범위의 비경제가 있고, $SC_N = 0$ 이면 범위에 대한 수확불변인 것으로 정의되며, 마찬가지로 SC_T 는 부분세트활동그룹 T 와 $N-T$ 간의 범위의經濟與否를 정의하게 된다. 만일 $T=1$ 이면 SC_T 는 단일활동과 나머지 모든 활동($N-1$)간의 범위의 경제성 여부를 정의하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활동들을 통합해서 경영하는 경우가 이들 활동들을 각각 분리 독립해서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BPW에 의하면 $SC_N > 0$ 은 N 개의 활동이, 그리고 $SC_T > 0$ 은 T 와 $N-T$ 세트의 활동이 통합경영되는 必要充分條件이다.

이상의 정의식들을 이용하면, 規模의經濟와範圍의經濟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BPW, *ibid*, p. 74).

$$S_N = [\alpha_T \cdot S_T + (1 - \alpha_T) \cdot S_{N-T}] / [1 - SC_T] \dots\dots\dots(5)$$

여기서, $\alpha_T = [\sum_{i=1}^T y_i \cdot C_i(y) / \sum_{i=1}^N y_i \cdot C_i(y)] < 1$ 이며, S_{N-T} 는 부분세트 $N-T$ 의 규모의 경제를 측정한다.

나아가 多機能經濟組織이 競爭均衡下에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BPW, *ibid*, Chapter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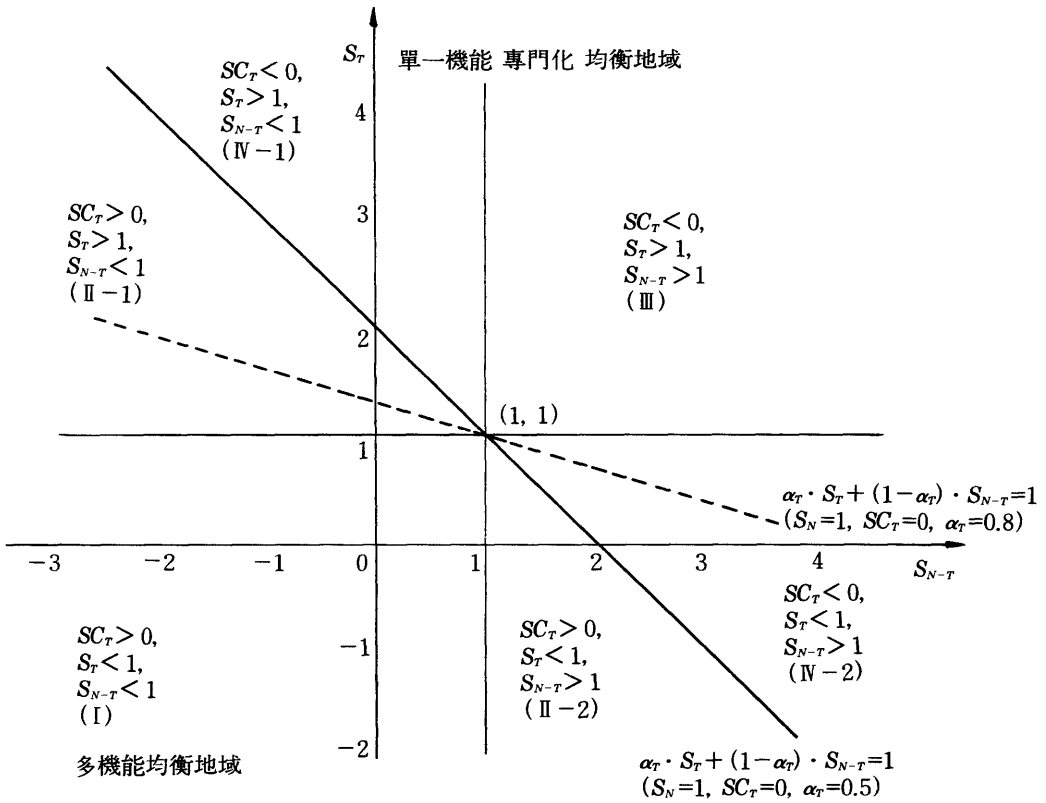
$$\text{競爭均衡條件} : SC_T > 0 \text{과 } S_N = 1 \dots\dots(6)$$

여기서 $SC_T > 0$ 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經濟組織이 多機能組織이 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이며, $S_N = 1$ 은 균형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전부 消盡되어야 한다는 競爭均衡의 일반적인 조건이다.

式 (5)와 (6)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多機能經濟組織의 均衡을 분류할 수 있다. [圖 1]에는 S_T 와 S_{N-T} 를 양축으로 해서 式 (5)를 그렸는데, 실선은 $S_N = 1$, $SC_T = 0$, 그리고 $\alpha_T = 0.5$ 로 가정한 경우이며, 점선은 $S_N = 1$, $SC_T = 0$, 그리고 $\alpha_T = 0.8$ 로 가정한 경우이다.

먼저 $\alpha_T = 0.5$ 인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실선의 윗부분은 $SC_T < 0$ 인 지역으로서 專門化 均衡地域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T 와 $N-T$ 세트의 활동이 서로分離 獨立된다. 역으로 동 실선의 아랫부분은 $SC_T > 0$ 인 지역으로 多機能均衡地域이라고 볼 수 있는데, T 와 $N-T$ 세트의 활동이 서로 統合兼營된다. 한편 Stigler의 경우는 $SC_T = 0$ 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균형지역이 바로 실선과 일치하게 된다.

[圖 1] 多機能經濟組織의 均衡



이 경우 한가지 흥미있는 결과는 多機能 均衡下에서는 T세트의 활동과 N-T세트의 활동이 동시에 규모의 경제하에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圖 1]에 의하면, 式 (5)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직선 하단의 다기능균형지역과 직선상의 Stigler의 경우 모두에 있어서 한 세트의 활동이 규모의 경제하에 있으면, 다른 세트의 활동은 규모의 비경제하에 있거나 혹은 두 기능이 모두 규모의 비경제하에 있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式 (5)에 의하면 $SC_T > 0$ 인 한 $S_N=1$ 이기 위해서는 S_T 나 S_{N-T}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모두가 1보다 작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기능조직은 규모의 경제하의 활동과 규모의 비경제하의 활동의 결합이나 혹은 모두 규모의 비경제하에 있는 활동들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하의 활동들간의 다기능조직균형은 성립될 수 없다 하겠다.

다. 比較靜態分析

이하에서는 이상 정리한 多機能經濟組織

理論을 이용하여 몇가지 중요한 경우에 대한 比較靜態分析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1) 市場規模의 擴大效果

比較靜態分析의 첫번째 경우로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經濟組織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모형의 구도내에서 볼 때 市場需要規模의 확대는 式 (5)에서 α_T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α_T 는 한계비용을 가중치로 한 T 개의 부분세트 경제활동의 생산량의 합의 전체 N 세트의 생산량의 합에 대한 비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경쟁균형에서는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α_T 는 T 개의 산출물의 매출액의 전체 N 개의 산출물의 매출액에 대한 비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T 세트 산출물에 대한 시장규모의 확대는 T 세트 산출물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α_T 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式 (5)에 의하면, α_T 가 증가할 경우 균형조건인 $S_N=1$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S_T 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S_{N-T} 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多機能組織의 균형은 와해된다. 균형회복을 위해서 S_T 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궁극적으로 多機能組織의 均衡이 규모의 경제가 큰 활동들을 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圖 1]에 의하

면, 점선으로 그린 $\alpha_T=0.8$ 을 가정한 균형선이 원래의 실선($\alpha_T=0.5$)에 비해 시계바늘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활동 T 가 보다 전문화되는 지역($N-1$), 즉 규모의 경제가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전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市場規模의 확대는 해당활동의 전문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技術革新의 效果

比較靜態分析의 두번째 경우는 기술혁신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본 모형의 구도내에서 볼 때 기술혁신은 규모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과 범위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規模의 經濟構造의 變化效果〉

技術革新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이 확대될 경우, 同 經濟活動은 여타 활동들로부터 分離·專門化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同 活動이 계속해서 多機能組織의 일부로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여타 활동들의 규모의 경제성이 감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결과는 式 (5)와 (6)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동 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대한 S_T 는 T 세트의 활동들이 다기능조직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게 되며, [圖 1]에서는 동 S_T 가 실선의 상부인 단일기능전문화 균형지역에 떨어지게 됨을 시사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T 세트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兼營될 수 있도록 증가된 S_T

가 式 (5)와 (6)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N-T$ 세트의 활동들의 규모의 경제정도 (S_{N-T})가 감소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圖 1]에 의하면 실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게 된다.

〈範圍의 經濟構造의 變化效果〉

만일 技術革新으로 인해 여러 활동들간의 범위의 경제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개별활동들의 규모의 경제가 소진됨으로써 결국 새로이 발생된 전체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소진되어야 새로운 균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새로 창출되는 전체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균형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 결과는 式 (5)와 (6)에 의하면, SC_T 가 증가하면 $S_N > 1$ 이 되기 때문에, 균형조건 $S_N = 1$ 을 회복하기 위해 S_T 와 S_{N-T} 가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圖 1]에 의하면 실선이 SC_T 가 증가함에 따라 원점방향으로 평행이동함으로써, 기존의 多機能組織의 일부로서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활동

들은 이제 새로운 균형에서도 다기능조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나오는 현실적으로 보다 흥미있는 시사점은 아마도 범위의 경제의 증가라는 충격에 따른 動態的 適應過程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範圍의 經濟(SC_T)의 증가에 따른 다기능조직의 적응형태는 다음의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市場需要의 規模가 충분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전경제활동의 규모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개별 활동들의 규모의 경제를 소진함으로써 S_T 와 S_{N-T} 를 감소시켜 $S_N = 1$ 을 회복하는 경우이다. 시장규모가 충분하고, 경쟁이 심하지 않아 市場占有率을 원하는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시장수요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모든 활동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인데,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세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가지의 경우는 비효율적인 불균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전체 생산활동(N)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시장규모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소진하지 못함으로써 해당기업이 비경쟁적 산업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²⁾ 이러한

2) 다기능조직이론에서는 단일기업(기능)조직이론에서와는 달리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것 ($S_N > 1$)이 해당산업이 자연독점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소진되지 못할 경우의 정확한 산업구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BPW(*ibid.*; Chapter 7)를 참조. 따라서 이 경우는 단지 경쟁균형이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해당산업이 비경쟁적 구조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경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지나친 다각화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 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협소한 국내 시장으로 인한 전문화 제약여건하에서 기술 혁신에 따른 범위 및 규모의 경제성의 향상 은 결국 지나친 다각화와 독점적 산업구조 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또 다른 경우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개별 경제활동들의 최적 생산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소량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범위의 경제의 증가로 多機能組織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최적 생산규모의 축소현상이 일어남 으로서, 소위 최근 유행어가 되고 있는 소량·다품종생산체제가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 있어 서든 범위의 경제의 증가는 다기능조직의 최적 생산규모를 확대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생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균 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향유하든 아니면 시장규모의 협소에 따른 비경쟁적 산업구조 로 인해 초과이익을 향유하든, 결과적으로 는 다기능조직의 활성화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관련하여 범위의 경제가 부재하던 기 능들간에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범위의 경제가 창출된 경우라든가 혹은 기존의 기 능들과의 사이에 범위의 경제를 가지는 완 전히 새로운 기능(제품)이 도입될 경우에

있어서도, 다기능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게 될 것이다.

Ⅲ. 世界市場 與件變化와 經濟構造 : 理論의 應用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多機能經濟 組織理論을 응용하여 금후 예상되는 世界市場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內生的 變化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최근 世界産業 組織上에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한 논평이나 이론적 설명도 시 도해 보기로 하겠다.

1. 世界市場의 統合화와 經濟構造

세계시장의 통합화 추세가 보다 진전되 고, 세계가 국경 없는 單一市場으로 통합됨 에 따라 다음과 같은 經濟構造上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각국 경제가 동일한 市場規模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각국의 경제·산업조직 은 서로 유사한 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국가경제간의 생산기술적 노하우가 다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경제통합화 자 체가 기술적 조건의 漸進的 均等化를 초래 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적

경제·산업조직의 내용은 국가경제간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구조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시장의 통합이 潛在的으로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규모생산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경제·산업구조의 전문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통합이 경쟁심화를 통해 오히려 市場占有率의 하락을 초래할 경우에는 역으로 다각화를 촉진시키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로, 최근 들어 소위 消費네트워크經濟(network economy in consump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市場規模의 潛在的인 확대는 소비자층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경제하의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³⁾ 소비네트워크경제의 실현은 결국 표준화(standardization)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누적적 확대효과를 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同 産業의 생산의 전문화와 대규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소비네트워크경제하의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市場統合과 規模擴大의 이점을 상대적으로 더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이란 대체로 정보통신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情報通信産業의 발달에 의해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서는 情報通信産業의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情報通信産業의 高度化와 經濟構造

世界市場의 統合은 情報通信의 발달에 의해 촉진되어 왔지만, 역으로 世界市場의 통합은 情報通信産業의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이미 지적인 소비네트워크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란 바로 통신이나 컴퓨터산업 자체이거나 혹은 이들 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규모와 소비자층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情報通信産業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情報化와 統合化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情報通信産業이 보다 발달된다는 것은 經濟組織全體로 볼 때 어떠한 含意를 가질 것인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經濟組織內의 각종 경제활동들간의 연계관계를 높임으로써 경제내의 범위의 경제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情報移動의 신속성 때문만 아니라 多用途를 갖는 정보의 축적이나 정보통신기기의 공유에서 생기는 범위의 경제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의 진전과 技術革新을 수반하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는

3) 소비네트워크경제의 성격과 경제·산업조직상의 함의점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Katz and Shapiro(1986), Saloner and Shepard (1992), 그리고 Cabral and Leite(1992) 참조.

경제내의 각종 활동들간의 범위의 경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經濟·産業組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활동들간의 범위의 경계의 증가는 多機能經濟組織의 활성화와 최적 생산규모의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소량·다품종생산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는, 경제내에 多機能組織이 活性化됨으로써 각종 기능들간의 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 종래 생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온 제조업, 농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분류의 의의가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相互補完性이 증대되어 생산과정의 통합화가 진전됨으로써, 종래의 기준에 의거한 산업의 개념과 산업분류의 의의가 반감될 것이다.

셋째로, 최근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소량·다품종생산체제를 유연하고 넓은 생산조직으로서, 일종의 대량생산체제를 대변하는 포디즘(Fordism)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다기능경제조직이론의 체계내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가지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범위의 경계가 발생함

에 따라 최적 생산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방법이 고안되면서, 소량·다품종생산조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포디즘 생산체제를 받치고 있는 컴퓨터, 로봇, 정보처리산업 등은 기본적으로 多用途 産業으로서 이 산업의 지원을 받는 각종 경제활동간에는 높은 범위의 경계가 창출된다. 이에 따라 경제내에는 多機能組織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다용도 고정시설 투자비용이 여러 활동에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개별 활동의 최적 생산규모가 축소된다.

이러한 설명은 情報通信産業의 발달을 새로운 생산체제의 등장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포스트포디즘은 시장경쟁의 심화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역·금융 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시장이 통합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종전의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으로써 경제활동의 統合化 現象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즉 市場需要의 축소에 따라 다품종의 兼營體制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러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 즉 높은 범위의 경제와 낮은 규모의 경제가 결합되는 생산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소량·다품종의 새로운 生産體制가 정립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각에서 보든, 포스트포디즘은 기존의 해석과 같이 단순한 생산조직상의 재편문제라기보다는 生産技術自體의

4) 포스트포디즘 생산체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Oman(1993) 참조.

革新을 수반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된다.⁵⁾

IV. 우리나라의 經濟構造調整 政策 方向에 대한 示唆

이하에서는 세계시장의 통합과 情報通信 技術의 심화에 대비한 未來指向的인 경제구조조정정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세계각국의 경제·산업조직의 효율적 구조가 점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대체적인 추세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經濟·產業組織의 構造를 추구해 나갈 경우는 오히려 經濟的 非效率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市場規模의 확대에 따른 專門化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多角化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업종에 따라서 전문화된 대량생산체제와 소량·다품종생산체제

가 공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混合體制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의 二分法으로는 새로운 經濟組織을 특징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 본다면, 아마도 새로운 혁신에 의한 새로운 활동 혹은 제품이 多機能組織의 일부로서 새로이 도입됨과 동시에 시장 규모가 충분히 확보된 기존의 활동 혹은 제품들은 독립·전문화됨으로써, 전문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구조조정 및 산업정책은, 이와 같이 미래의 經濟·產業組織의 구조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주도하에 구체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모색하려 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직 경쟁과정을 통해서만 효율적인 경제·산업조직의 구조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左承喜, 1994).

이러한 시사점은 제조산업은 물론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전문화니 겸업화니 하는 이분법에 의한 금융산업 개편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사를 얻게 된다. 오히려 금융자율화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전문화된 겸업화된 시장여건과 금융

5) 기존의 시각은 포스트포디즘을 技術革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生産組織(production organization)의 재편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산조직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動因은 技術革新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시각에 대해서는 Oman (1993) 참조.

혁신의 추세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산업조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금융정책이 취할 바른 길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業種專門化’라든가 ‘大型化’라는 정책목표도 앞으로 민간주도에 의한 經濟·產業組織의 自生的 구조조정방향에 역행하게 될 우려가 높다 하겠다. 더구나 기업이란 조직 자체가 단일기능조직이 아니라 多樣的 業種이나 產業分野에 걸쳐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는 多機能經濟組織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적정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재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생적 경제제도에 의하면 소위 재벌의 지나친 ‘문어발식’ 업종다각화가 근본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규모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다각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경쟁품토의 조성 등 시장여건의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合理的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產業分類의 명료성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치게 기존의 산업분류에 집착한 產業政策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製造業과 서비스業, 심지어 금융서비스업과의 연계문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金融監督의 強化를 통해 금융의 同一人 대출집중과 금융과 산업의 경영연계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면, 금융업과 제조산업의 소유연계 허용문제도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와 통합화의 진전으로 產業이라는 概念보다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합경영하는 企業이라는 개념이 經濟的으로 보다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산업보다는 오히려 기업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微視經濟政策을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세계시장의 統合化 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經濟·產業構造의 調整方向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產業政策의 기본방향도, 정부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구체적인 經濟·產業組織의 최적구조가 모색될 수 있도록, 기업의 經營與件을 보다 자유롭게 개선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된다.

▷ 參 考 文 獻 ◁

- 左承喜, 「政府公共政策機能의 限界와 市場秩序의 役割에 대한 考察」, 『韓國開發研究』, 第16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94.
- Alchian, 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 pp. 777~795.
- Bardhan, Pranab,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Development Theory: A Brief Critical Assessment," *World Development*, Vol. 17, No. 9, 1989, pp. 1389~1395.
- Baumol, William J., John C. Panzar, and Robert D. Willig,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1982.
- Cabral, Luis M. B. and Antonio P. N. Leite, "Network Consumption Externalities—The Case of Portuguese Telex Service," in C. Antonelli(ed.),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Networks*, North-Holland, New York, 1992, pp. 129~139.
- Coase, R.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1960, pp. 1~44.
- Demsetz, H.,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 1967, pp. 347~359.
- Hayek, F. A.,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in Nishiyama Chiaki and Kurt R. Leube(eds.), *The Essence of Hayek*,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4, pp. 254~265.
- , "The Pretence of Knowled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5, 1989.
- Jwa, Sung-Hee, *Endogenous Financial Systems: Theory and Evidence*, Mimeo,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uly 1994.
- Katz, Michael L. and Carl Shapiro, "Technology Adop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No. 4, 1986.
- North, D.C., *Transaction Costs,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An

-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Publica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1992.
- Oman, Charles, *Globalisation and Regionalisation: The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Development Centre, 1993.
- Saloner, Garth and Andrea Shepard, *Adoption of Technologies with Network Effects ;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Adoption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NBER Working Paper No. 4048, Cambridge, Massachusetts, 1992.
-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win Cannan(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Stigler, George J.,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LIX, No. 3, 1951.
- Stiglitz, J.E., "The New Development Economics," *World Development*, Vol. 14, No. 2, 1986, pp. 257~265.
- Williamson, Oliver E., "Transaction Cost Economics," R. Schmalensee and R. D. Willig(eds.),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 North-Holland, New York, 1989.